

# 시사원정대 NIE 2023-4월호



##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 교재 들여다보기

###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 2) 시사네컷

전 세계에서 주목받은 최신 이슈의 내용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알아봅니다.

주요 장면과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례를 현실감 있게 이해해 봅니다.

### 3)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4)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 5)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4월호 1주 (90분)		
학습 목표	챗GPT를 과제에 활용하는 것의 장단점을 생각해 본다. 인구소멸시대에 주목 받을 직업을 탐구한다.		
활동 초점	- 챗GPT를 활용해 과제를 할 때 걱정되는 점을 알고 챗GPT를 잘 활용하는 법을 이야기해 본다. - 인구소멸시대에 변화될 사회를 상상하고, 어떤 직업이 필요해질지 생각해 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10
펼치기	- <b>38~41 찬반배틀</b> 챗GPT, 과제에 활용해도 될까?	- 챗GPT - AI 도구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	45
	- <b>14~25 커버스토리</b> - 인구소멸시대, 위기의 직업은? - 연결자의 임무, 사람 연결해 사회 통합 - 미래직업 연결자의 활동 미리보기	- 인구소멸시대의 뜻 - 인구 감소와 고령화 - 연결자의 역할과 임무	25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인구소멸시대를 살아갈 '연결자'로서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자.	10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4월호 1주		
학습 목표	인구소멸시대에 주목 받을 직업을 탐구한다.		
활동 초점	- 인구소멸시대에 변화될 사회를 상상하고, 어떤 직업이 필요해질지 생각해 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 퀴즈로 어휘 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b>14~25 커버스토리</b> - 인구소멸시대, 위기의 직업은? - 연결자의 임무, 사람 연결해 사회 통합 - 미래직업 연결자의 활동 미리보기	- 인구소멸시대의 뜻 - 인구 감소와 고령화 - 연결자의 역할과 임무	15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인구소멸시대를 살아갈 '연결자'로서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자.	2

## 찬반배틀

### 챗GPT, 과제에 활용해도 될까?

<어휘 UP>

AI 챗봇: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채팅 목적의 로봇.

코딩: 프로그램 언어의 명령문을 써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

부정행위: 올바르지 못한 행위.

표절: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씀.

학습격차: 학습의 정도가 벌어져 서로 다른 정도.

<발문>

1. 챗GPT를 과제에 사용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2. 챗GPT를 과제에 활용한다면 최소한 어떤 규칙이 필요할지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 “이 문제의 답을 알려줘”... AI 챗봇 활용해 숙제하는 미국 학생들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활용해 숙제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학생들 때문에 미국 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신문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챗봇은 사람이 채팅으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대답을 해주는 대화형 메신저.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답을 찾고, 진짜 사람이 말을 하듯 답을 내놓는 것이 특징이다.

'챗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 업체인 '오픈AI'가 지난달 내놓은 챗봇 프로그램으로 최근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인간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대화를 구현할 수 있어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창작 등의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챗GPT가 구글과 같은 검색 포털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챗GPT를 활용해 실제로 숙제를 했다는 학생들을 인터뷰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라는 과제를 하면서 챗GPT에게 물었고, 챗봇이 내놓은 답변을 고스란히 옮겨 적어 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이 나의 답변을 AI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글쓰기 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겨 적는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 이에 미국 교사들은 학생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교실에서 과제를 하도록 하거나 컴퓨터가 답을 내놓을 수 없는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어린이동아 2022-12-29]

## 커버스토리

### 인구소멸시대, 위기의 직업은?

<어휘 UP>

학령인구: 초등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시기인 만 6~12세의 총 인원수.

폐교: 학교의 운영을 폐지하거나, 그렇게 된 학교.

소아: 나이가 적은 아이.

폐업: 영업을 하지 않음.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임신이 가능한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함.

<발문>

1. 초등학교 선생님과 의사가 인구소멸시대에 위기의 직업으로 꼽히는 이유를 말해 보자.
2.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줄면 어떤 사회적 변화가 나타날지 그림으로 그려보자.

### <교사 참고자료>

#### [눈높이 사설] 지방은 산부인과 없어 '출산 난민' 늘어나

저출산(아이를 적게 낳음) 여파로 산부인과가 줄줄이 폐업(영업을 그만둠)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해 전국 분만실(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때 쓰는 방)은 1176개로 2년간 152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만 취약(무르고 약함) 지역도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42%인 105곳으로 빠르게 늘었지요. 분만 취약지란 차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분만실이 없어 응급 대응이 어려운 곳을 말해요.

분만 취약 지역 임신부들은 다른 지역 산부인과로 '원정(먼 곳으로 떠남)검진'을 다니고, 출산일이 다가오면 친정집 근처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아기를 낳은 후 허

약해진 기력을 회복하도록 보살핌)가 가능한 타 지역 산부인과로 '원정출산' 길에 오른다고 해요. 강원도는 화천 인제 양구 등 5개 취약지역 임신부들의 원정출산을 돕기 위해 강원대병원 옆에 출산 3주 전부터 머물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지요. 충북도는 보은 옥천 괴산 등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지역에서 임신부 전용 구급차 6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 임신부들은 구급차를 타고 1시간 넘게 걸리는 타 지역 산부인과로 원정검진을 다닙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안에는 분만키트도 준비해 놓은 상황.

원정검진과 원정출산을 경험한 출산 난민 들은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낳는 건 상상도 못 하겠다"고 말해요. 분만 수요가 줄면 산부인과가 폐업하고,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율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커요. 분만 취약지역 유산율(태아가 숨지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난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출산 정책 예산이 1조80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7% 늘었는데 이중 70%가 출산지원금 같은, 개인에게 직접 주는 예산이었어요.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분만과 육아 인프라에 투자해야 출산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부인과 폐업의 원인 중에는 의료 인력 부족도 있어요. 분만의 특성상 의료진이 24시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일이 잦은 데다 의료소송 위험이 커 산부인가를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료진이 부족해 분만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제왕절개(산모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는 수술) 분만만 하는 곳도 늘고 있지요.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을 늘리는 한편 잘못이 없는데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료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동아일보 3월 15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2023-03-16]

## 커버스토리

### 연결자의 임무, 사람 연결해 사회 통합

<어휘 UP>

각광받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흥미, 인기 등을 얻거나 끌게 되다.

출입국: 나라 밖으로 나가거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일.

이민: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디지털 소외계층: 경제, 지역, 나이, 신체 여건 등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

<발문>

1. 인구소멸시대에 외국인, 이민자와 정보소외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 주목받게 되는 이유를 말해 보자.
2. 외국인, 이민자와 정보소외층을 사회와 연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또는 필요한 능력을 이야기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자료1> [달라도 다함께/다문화, 해외서 배운다]<1>선진국들의 이민 정책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2005~2010년 세계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1.18%이고 선진국은 0.34%인 데 비해 한국은 0.30%에 불과하다.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현재 4875만 명에서 2050년엔 4234만 명으로 지금보다 641만 명(13.2%) 줄어든다. 반면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돼 65세 이상 구성비는 2010년 11.0%에서 2050년 38.2%로 높아진다.

한국에 앞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은 유럽 국가들은 어두운 미래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다문화 사회'를 선택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현상을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키워나가면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다문화는 선택 아닌 필수

덴마크는 1950년대부터 이민을 받아들여 1990년 이후 그 폭을 더욱 늘리고 있다. 1990년대 전체 인구의 4%였던 이민자 비율은 2007년 6.9%까지 높아졌다. 수도 코펜하겐의 경우 이민자 비율은 약 15%나 된다.

덴마크 난민·이민·통합부의 헨리크 쿠스고 통합실장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덴마크에서 이민자들이 없다면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며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 수준이 낮고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지만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부작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1980년까지 이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취하지 않았지만 이후 이민자들이 점차 늘어나자 2002년 체계적인 통합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3년간 무료로 언어, 직업 교육을 시켜준다.

1962년 영연방 이민법을 제정해 이민자를 받고 있는 영국은 적극적인 동화정책 보다는 이민자의 고유 전통을 인정하는 다문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이민자들을 교육시키기보다는 각종 이민자 단체와 백인 주류사회 간 교류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문화를 주로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러니미드 트러스트'의 롬 버클리 박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모아 캠프를 열거나 박물관에서 소수민족의 패션과 디자인이 영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말 '2009 세계 이민 보고서'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는 이민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 체류자를 합법 노동자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급 인력 유치에 나선 선진국

일본 도요타(豊田) 시에 있는 대규모 주거지 호미(保見)단지에는 일본계 브라질인 8000여 명이 살고 있다. 1990년에 주로 입국한 이들 중 3500여 명은 경기침체로 최근 대량 해고됐다. 실업자들이 늘면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자 일본 내에서는 단순 노동자보다는 고급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보다 이민 정책을 먼저 시작한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과거엔 망명과 단순 노동자들의 유입이 많았지만 최근엔 자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해선 이민 문턱을 낮춰가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다.

스웨덴은 최근 숙련 노동자 유입에 초점을 맞춘 이민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과거엔 소말리아, 이라크, 이란 등 정치 망명으로 인한 이민자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자국에서 필요한 고급 인력 유입에 더욱 신경을 쓸 계획이다. 스웨덴 기업에 채용되면 입국 수속 기간을 줄여주고, 우수 인력을 해외에서 영입하는 고용주에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는 의사, 엔지니어, 치과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덴마크에서 필요한 직업군의 사람이 이민을 원할 경우 영주제도 점수제와 상관없이 이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펼친 결과 인도 미국 중국에서 우수 인재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민 2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자국에서 필요한 인재로 키우려는 국가도 많다. 독일은 18세 미만 이민자 2세의 교육을 강조한다. 베를린 주정부의 게르머스 하우젠 이민자 통합문제 담당관은 “이민 1세대 부모들은 고학력자보다는 주로 저학력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2세는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노력한다”며 “이민 2세대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역시 언어가 서툰 이민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언어는 물론이고 아일랜드의 문화와 풍습 등도 가르친다. 자녀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 교육을 하기도 한다.

○ 한국도 이민 정책 고려할 시기

OECD가 최근 소속 30개국의 2005년 20~24세 인구를 100으로 놓고 20년 뒤인 2025년 20~24세 인구(이민 제외)를 예측한 결과 한국은 2025년 65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30개국 가운데 폴란드(54), 슬로바키아(57)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폭. 20~24세의 인구 감소는 경제와 노동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 감소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화되자 이제 한국도 노동력 감소 문제를 일부 이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미국 시카고대 교수도 고령화 사회로 가는 한국이 출산율을 급격히 높일 수 없다면 이민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동아일보 2009-09-16]

<자료2> 서울시, 55세 이상에 1대1 스마트폰 무료교육...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서울시가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일상 속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콜센터(02-570-4690)를 통해 일대일 스마트폰 무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다.

교육 장소는 서울시 권역별 학습장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은평종합재가센터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관악구 신한은행 디지털라운지(낙성대, 서울대입구 지점) 등이다.

교육 내용은 △스마트폰 설정 및 기초(블루투스, 와이파이 설정, 문자 전송 등) △카카오톡 활용(프로필 편집, 사진 전송, 메시지 공유 등) △실생활 애플리케이션 활용(기차 예매, 지도앱 활용 등)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최근 서울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민의 디지털 기술 이용 평균 수준을 100점이라고 할 때 장년층과 고령자를 포함한 만 55세 이상은 67.2점에 그쳤다.

서비스별로 △뉴스 및 정보 검색(88점) △교통정보·길찾기(81점) 등은 평균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배달음식 주문(59점) △예매 예약(58점) △공공서비스 이용(58점) 등에서 차이가 컸다.

[동아일보 2022-06-23]

## 커버스토리

### 미래직업 연결자의 활동 미리보기

<어휘 UP>

다문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섞인 것을 이르는 말.

총망라: 전체를 모아 포함시킴.

배리어프리: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이거나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은퇴: 직장에서 맡은 임무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코디네이터: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발문>

1. 다문화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 3가지를 말해 보자.

2.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나 어울림의 장벽을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을 네 컷 만화로 그려보자.

<교사 참고자료>

<자료1> 다문화 정책 10년, 전문가 10인에 물어보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지 10년이 지났다. 정부는 2006년 4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해 시행했고,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이후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여성은 30만5000명, 이들이 낳은 2세는 20만8000명(2015년 7월 기준)에 이른다. 다문화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여성가족부가 14일 발표한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청소년은 2012년) 조사 때보다 각각 2.78점, 7.51점 상승한 수치다.

이에 동아일보는 다문화사회 10년을 맞아 전문가 10인에게 다문화 정책 10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시행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민 여성에게 한국어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통·번역 전문가로 키워 취업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후 명칭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됐다. 2006년 21곳에서 2016년 217곳으로 늘었다. 이 밖에 불법 결혼중개업 철폐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쉬운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과 '다문화가족 청소년기 자녀, 부모 상담'이 꼽혔다. 두 정책 모두 취지는 좋았지만 실효성이 적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 다문화 지수 높아져...청소년이 가장 높아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많이 늘었고 섬세해졌지만,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와 배타적 태도는 여전하다"며 "앞으로 다문화 정책의 초점은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수용성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 등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의미한다.

물론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계속 나아지는 추세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다문화에 대해 수용적이었다.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60대 이상(48.77점)이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내려가면서 점차 올라가 청소년(67.63점)이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등 8개 구성요소별 설문 결과를 종합해 산출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다. 조사는 전국 19~74세 성인 4000명과 중고교생 36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다문화의 주류화 전략이 필요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1.8%로 미국(13.7%)과 호주(10.6%), 스웨덴(3.5%)보다 훨씬 많았다.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비율 역시 60.4%로 미국(50.5%), 독일(41.5%), 호주(51.0%)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모두 다문화 구성원을 나와는 다른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특수한 배려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다문화가족을 동등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주류화 전략(mainstreaming)'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순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도 "캐나다의 경우 특별한 교과서나 따로 시간을 할애해 다문화를 가르치지 않지만 교육과정 전반에서 소수자와 다문화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도 다문화를 동등하게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2016-03-15]

## <자료2> 어르신 디지털 활용 돕는 '안내사' 뜬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시 공원이나 영화관 등에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안내사'가 배치된다. 인공지능(AI) 강사가 디지털 역량을 진단한 뒤 교육해주는 맞춤형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서울시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1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서 만 55세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69.1%였다. △저소득층(95.4%) △장애인(81.7%) △농어민(78.1%) 등 다른 소외계층에 비해 유독 낮았다. 시는 2026년까지 이들의 점수를 90점까지 올리고, 50만 명의 고령층에게 디지털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 ○ 공원, 영화관에 '디지털 안내사' 100명 배치

시는 7월부터 노인들이 자주 찾거나 모이는 '핫플레이스'에 '디지털 안내사' 1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수강생이 강의를 찾아 듣는 대신 직접 고령층을 찾아가 교육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통신사와 생활인구(서울에 살거나 출퇴근 등의 목적으로 서울을 찾는 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고령층이 많은 공원, 산책로, 영화관 등을 선정한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일자리 모델 중 하나로 '안심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진행된다.

만 55세 이상이 또래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어디나지원단' 사업도 강화한다. 2019년부터 서울디지털재단이 진행했는데, 3년(2019~2021년)간 350명의 강사가 1만970명의 수강생을 교육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활용 음식 주문 △화상회의 앱 '줌(Zoom)' 설치 △키오스크 활용 카페 음료 주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긴 문화 적응을 돕는 내용이 있다. 올해는 강사 150명을 선발해 교육생을 지난해(8323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 ○ AI 디지털 역량 진단 후 맞춤형 교육

이달부터 원하는 사람 누구나 디지털 역량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디지털배움터' 수업도 진행한다. 지역 주민센터, 복지관 등 123곳의 디지털배움터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키오스크, 태블릿PC 등의 이용법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도 이달 개관했다. 서울시청 시민청 내 '스마트서울전시관', 구로구 '스마트구로홍보관', 도봉구 창동아우르네 내 '스튜디오 체험관' 등 세 곳이다.

고령층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AI 강사 기반으로 수강생의 역량을 진단해 맞춤형 교육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

올디지털재단 어디나지원단의 임정빈 강사는 “같은 어르신 세대 내에서도 필요로 하는 디지털 교육의 종류가 다르다”며 “80대는 교육보다도 말벗이 되어주길 원하고 60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기능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시는 개별 역량 진단과 교육 콘텐츠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2-04-21]